

#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하세요

도, 올해 100호 우선 선정... 지정 시 자조금 지원·축산환경관리원 컨설팅 등 혜택

전북도는 축산농가의 고품질 축산물 공급과 주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깨끗한 축산농장'을 2025년도까지 1,500농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가축의 사양관리, 환경오염 방지,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 가축분뇨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축산농장이다.

축산업 허가 받은 축산농가 중 축산법 등 관련법규를 2년간 위반한 적이 없는 농장을 대상으로 2017년도

에 100호를 우선 선정하고 2025년까지 1,500호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기준은 총100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 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며 소는 축사 바닥 상태 및 경관을 중심으로 돼지, 닭은 축사악취를 중심으로 평가된다.

'깨끗한 축산농장'을 신청하려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평가 절차에 의해 최종 농립 축산식품부로부터 지정서를 받게 된다.

선정절차는 신청(농가)→ 서류심사, 현장평가(시군)→ 집계·검증의뢰

(도)→ 1차검증(축산환경관리원)→ 검증결과 검토·제출(도)→ 2차검증(농식품부)→ 농가지정(농식품부)이다.

지정서를 받은 농장은 개별처리시설 지원사업 시 사업대상자에 우선 선정되고, 자조금 지원, 축산환경관리원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5년마다 재평가를 통한 유지관리를 받게 된다.

지원내용 (개별처리시설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 (2017년:67개소 31억1200만원), (자조금 등 지원) 입간판, 울타리 등 축사외부 경관 개선 지원, (컨설팅) 축산환경관리원

컨설팅, 사후관리 등 지원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시달교육을 실시(8월3일)하였으며 생산자단체 및 축종별 협회와 연계해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지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를 통해 지역주민 갈등 해소 및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연막탄 발사하는 K21장갑차  
육군 제11기갑화보병사단이 4일 실시한 공지합동훈련에서 K21장갑차가 연막탄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11기갑화보병사단 제공)

## 휴가철 유행성 눈병 '주의' 손씻기 등 위생 준수 당부

전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더위 절정 시기와 더불어 유행성 눈병 환자 증가가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4일 밝혔다.

유행성 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의 눈 분비물 또는 오염된 물건 등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감염되며, 여름 휴가철 물놀이 후 많이 발생한다.

특히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 생활시설과 수영장에서는 유행성 눈병 감염 가능성이 높고 전파가 빠르기 때문에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이상 증상 시 조기에 반드시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 익산시 안전 캠페인 전개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제257차 안전점검의 날 맞아 지난 4일 금강유람선장,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주변에서 안전의식 강화캠페인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익산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전북지역본부, (주)전북에너지서비스, 익산FP가스협회, 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봉사단, 1P가스협회, 익산시 민간에할 단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행락철을 맞아 내수면 유·도선에 대한 유·도선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익산시, 전기안전공사 익산지사와 자율방재단, 민간에할단 등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유도선 자체점검 관리실태, 매월 자체훈련실시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부모님 고향 '전북도' 만끽

출향도민 자녀 초청 문화체험·산업현장 견학

(사)전북예향운동본부는 여름방학기간 출향도민 자녀들을 고향에 초청하여 문화체험, 산업현장 견학 등을 통하여 고향에 대한 이해와 추억을 간직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8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정착해 살고 있는 향우회원들의 자녀들을 초청, 이들이 부모님의 고향 발전상을 직접 확인, 전주한옥마을, 익산 백제문화유적지구, 순창 고추장민속마을 등 도내 문화체험 및 산업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전북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부모님의 고향을 찾은 향우회원 자녀들은 첫날 오전 익산 백제문화유적지구를 방문, 백제의 찬란한 예술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오후에는 전주 한옥마을 투어를 통해 천년의 역사 한국의 맛과 멋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서 전통문화를 경험했다.

저녁에는 전주비빔밥 퍼포먼스

및 전북 관광브랜드 상설공연 뮤지컬 '똥다 심청'을 관람하는 등 한옥마을에서 한옥 숙박 체험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을 방문하여 장류체험 및 장류연구소, 메주공장, 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 등 산업체함을 통해 전통의 손맛과 건강한 고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발전하는 전라북도의 모습을 경험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국 최초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순창 강천산에서 호남의 소금강으로 불리는 명산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산림욕장, 맨발산책로, 구름다리 등을 둘러보고 돌아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부모님의 고향을 방문한 자녀들이 전북의 발전상을 직접보고 느끼고, 다양한 문화체험과 산업현장 견학을 통해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태풍 '노루' 복상... 대응태세 가동

익산시, 재난관련 부서 긴급회의 등 발 빠른 대응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태풍 노루(NORU)복상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김철모 부시장 주재로 지난 4일 오후2시 익산시 재난대책본부에서 13개 협업부서 및 경찰서, 소방서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태풍 노루(NORU)는 8월4일 현재 중심기압 955hpa, 최대풍속 40m/s 강도는 '강' 크기는 '소형'으로 빠른 속도로 서쪽으로 진중에 있고 8월 7일 간접적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익산시 재난대책본부에서는 비상태세를 확립하여 재해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한 주민 홍보 및 기상특보 상황을 전파한다.

익산시는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에 따라 태풍주의보 발효 시에는 비상1단계 97명, 경보 발효시에는 2분의 1 이상 공무원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김철모 부시장은 농작물, 비닐하우스, 배수펌프장, 광고관, 현수막 고정 각종 공사장점검, 인명피해 우려지역 세일교, 급경사지지역, 언더패스 등 사전점검 및 통제를 당부했다.

또한 지역방송, CBS익산재난문자발송, 지동음성통보시스템, 마을앰프 등을 활용한 사전 홍보를 실시하여 신속히 대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발 빠른 대응을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은 기상상황 정보를 예의주시하면서 태풍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해 주기 바란다"며 "태풍 피해에 대비해 집 주변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사드 부지 전자파 재측정

국방부, 오는 10일 주민 참관 하에 현장확인 실시

국방부는 오는 10일 환경부와 지역주민 및 관련단체 참관 하에 경북성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 부지에서 전자파, 소음 등의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일부 사드 장비가 배치된 1차 주한미군 공여지 32만여㎡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다.

국방부는 "환경부는 우리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

로 10일 관계 전문가와 합동 현장확인단을 구성해 현장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전자파, 소음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 측정결과와 작성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 부처가 협의해 지역주민 및 관련단체 참관 하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전자파 안정성 측정을 실시하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협의 중이었는데 취소됐다"며 "성주 사드기지의 전자파 안정성 측정이 관련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필수가 아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전자파에 대한 주민우려를 고려해 환경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드 잔여 방사선 4기 임시배치 관련성에 대해 "급하게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